

“카페 홀영업 재개 숨통”...“과태료 물더라도 영업”

거리두기 연장...지역 업종별 자영업자들 희비 엇갈려

카페업주 “시간 제한에는 의문”...유흥업소, 집단 반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강력한 거리두기 지침을 일부 완화하면서 자영업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카페 업주들은 영업 재개에 숨통이 트였다며 반기는 반면 유흥업소는 지속되는 집합금지 명령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일일 평균 2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금지 등 핵심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 조정이 이뤄졌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2인 이상 커피·음료·디저트를 주문할 경우 매장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강력 권고를 명시했다.

카페 업주들은 지침이 일부 완화된 데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카페 특성상 주로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2인 이상 1시간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한 카페 업주 강(34)모씨는 “거리두기는 연장됐지만, 카페 업종은 일부 하향되면서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배달·포장만 했으면 정말 문을 닫을 뻔 했다”면서도 “지역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2인 이상 시간당 제한한다고 해서 잘 지켜질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광주지부 관계자는 “카페는 자체 수익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와 청년 고용 문제 등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지침 완화로 다소 환영에 뜻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것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흥업소의 경우는 오는 31일까지 집합금지 지침이 연장됐다. 관련 단체는 강력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방역 조치 적용 하루 전인 17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카페에서 관계자가 매장 내 의자와 테이블 등을 정리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는 지난 5일부터 문을 닫은 채 간판 불만 켜놓는 ‘점등 시위’를 시작으로 18일 거리두기 연장 시 영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져 온 거리두기에 반발하는 등 형평성 문제

를 줄곤 제기하며 ‘집합금지’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지역 내 업주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18일부터 영업 강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면 서로 분담할 방침이다.

서구 치평동, 북구 신안동, 광산구 쌍암동 등 광주 권역 700여곳의 유흥업소

가운데 400~500여곳 이상이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8일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갈 방침으로 ▲집합금지 해제 ▲해제 시 자정까지 영업 등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을 통해 관련 방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18일부터 당장 광주시청 앞에 찾아가 천막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최소 100여명 이상은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을 만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타 지역의 경우 집합금지를 제한한 데 이어 영업까지 허용하고 있다. 우리도 해제는 물론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우리만 집합금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외에도 목욕장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재개했다. 영업시설 면적 4㎡(1.21평)당 1명 인원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예배로 전환해 좌석수 20% 이내 인원을 참여하게 하고, 타지역 교류·초청행사는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금지 조치는 이어간다.

숙박시설의 경우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는 유지하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의무는 추가 조정했다. /김동수기자

‘호흡곤란 아기 기도 삽관했으나 사망’ 의료과실 인정

‘기각’ 원심 깨고 항소심서 일부 승소

호흡 곤란 증세를 치료받다가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에 대한 대학병원의 의료과실과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김태현 고법 판사)는 숨진 A(사망 당시 생후 1개월) 양 가족이 조선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의 책임을 60%로 인정

하고 학교법인 조선대가 원고에게 총 2억8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양은 2016년 1월7일 기침 증세로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A양이 급성 세기관지염인 것으로 보고 약을 처방한 뒤 퇴원시켰다.

그러나 A양은 다음날 폐렴·정색증으로 인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전남의 2차 의료기관을 거쳐 다시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왔다.

의료진은 A양의 호흡수가 불안정해 지자 기관 내 삽관을 시행했다.

이어 2016년 1월11일 밤 가래 제거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폐쇄형 기관 흡인을 시도했지만, 말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됐고 사망했다.

A양 가족은 병원 측이 기관 흡인 도중 튜브를 잘못 건드려 튜브가 빠져 식도에 들어가게 했고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중단돼 저산소증으로 숨졌다고 병원 측이 5억8천9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관계자 진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보완 결과 등을 보면 의료진이 충분한 깊이의 기도 삽관과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했고 산소포화도 하락 후 산소 공급 과정에서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삽관하지 못해 의료상 과실로 아기가 저산소증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영아는 성인보다 기도가 매우 짧아 삽관 깊이를 맞추기 어렵고 침이나 분비물이 많아 정확하게 삽관하기 어려운 점, 신체 구조상 조금만 움직여도 튜브 위치가 바뀌기 쉬운 점과 아기의 건강 상태, 의료진의 조치 등을 참작해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송지기자

관급공사 발미 1억여원 채긴 형제 실형

군청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역대 급품을 받은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화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하고 B(61)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군수와의 친

분을 활용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고자 청탁을 시도했고 실제 계약이 체결돼 불법이 현실화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순군청 관급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업체 운영자로부터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1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순군이 도로 결빙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동생 B씨가 군수와 친분이 있으니 사업을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수주에 성공하면 계약금액의 20%를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실제 군수와 수차례 통화하고 화순군 담당 공무원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순군은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법

원은 심의위원회 절차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 자료 준비를 위해 엔지니어링 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으나 해당 업체는 자동 염수분사 장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 3개 입찰업체 중 청탁을 시도했던 업체로부터 사업특허공법 자료를 받아 군청에 그대로 제출했다. 심의위원 중 내부 위원들은 외부 위원들과는 달리 업체들에 같은 점수를 부여했는데 모두 청탁을 시도한 업체에 최고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오송지기자

‘전화로 지지호소’ 이석형 예비후보 집유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금지된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한 이석형 예비후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지지자 10명은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3명)이나 벌금 100만~500만원(7명)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신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운동이 사실상 제한됐고 피고인들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당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3일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석형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광주 광산갑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후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예비후보가 재심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석형 후보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최고위는 이석형 후보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이용빈 후보를 공천자로 다시 결정했다. /오송지기자

주택가 수류탄 발견(?)해프닝

○...광주 한 주택가에서 수류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 수

사당국이 현장을 확인했으나 비살상용 연막탄으로 확인돼 해프닝으로 마무리.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한 주

택가 건물 사이에서 수류탄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 당국이 현장에 출동.

○...발견 물체는 수류탄이 아닌 비살상용 균용 연막탄으로 확인됐고, 길이 부식되는 등 방치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 경찰은 군 폭발물 처리 부대 육군 503여단에 연막탄을 인계했다고. /김동수기자

급매 전문

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웃음꽃 활짝 핀 날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즐거운 부동산 대표 유재관 올림

[급구]
○ 광주시내 빌딩급구(가부간 1주일내 결정)
○ 전남북 관내 농지및임야
= 조건 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토지보상금들고 대기중입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현대공인중개사

치평동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 370-1900 ☎ 010-2006-0115

〈 광주 인근 지역 매매 물건 구함 〉

(장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곡성)

물건의 종류 : 건물 / 대지 / 임야 / 전답 / 기타

〈 광주지역 매매 임대물건 구함 〉

물건의 종류 : 건물 / 토지

〈 급매물 단 시일 내 책임중개 〉

대표 공인중개사 김학제